

고령사회 인프라: 노인금융시장 구축

이 순 호

2016. 11. 24.



목 차

I. 고령화 현황

II. 고령사회와 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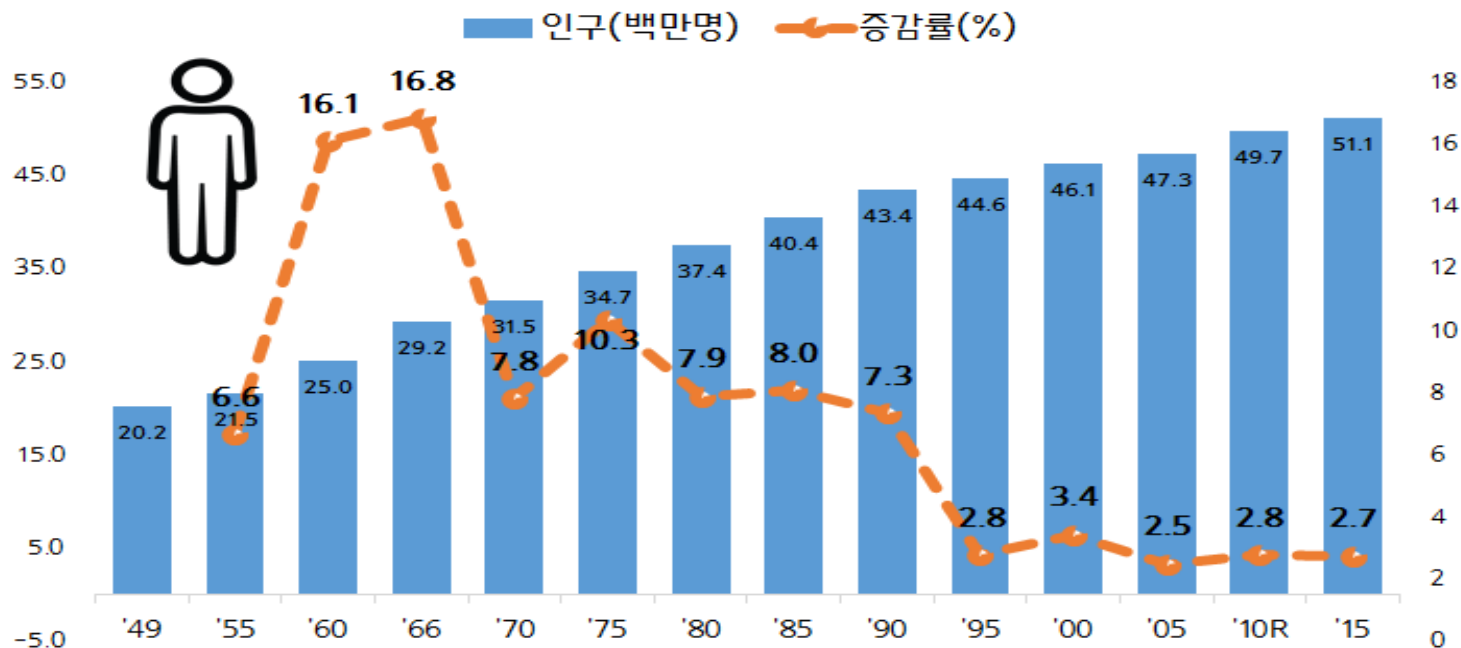
III. 고령사회 대비 금융인프라 구축방안

목 차

I. 고령화 현황

인구증가율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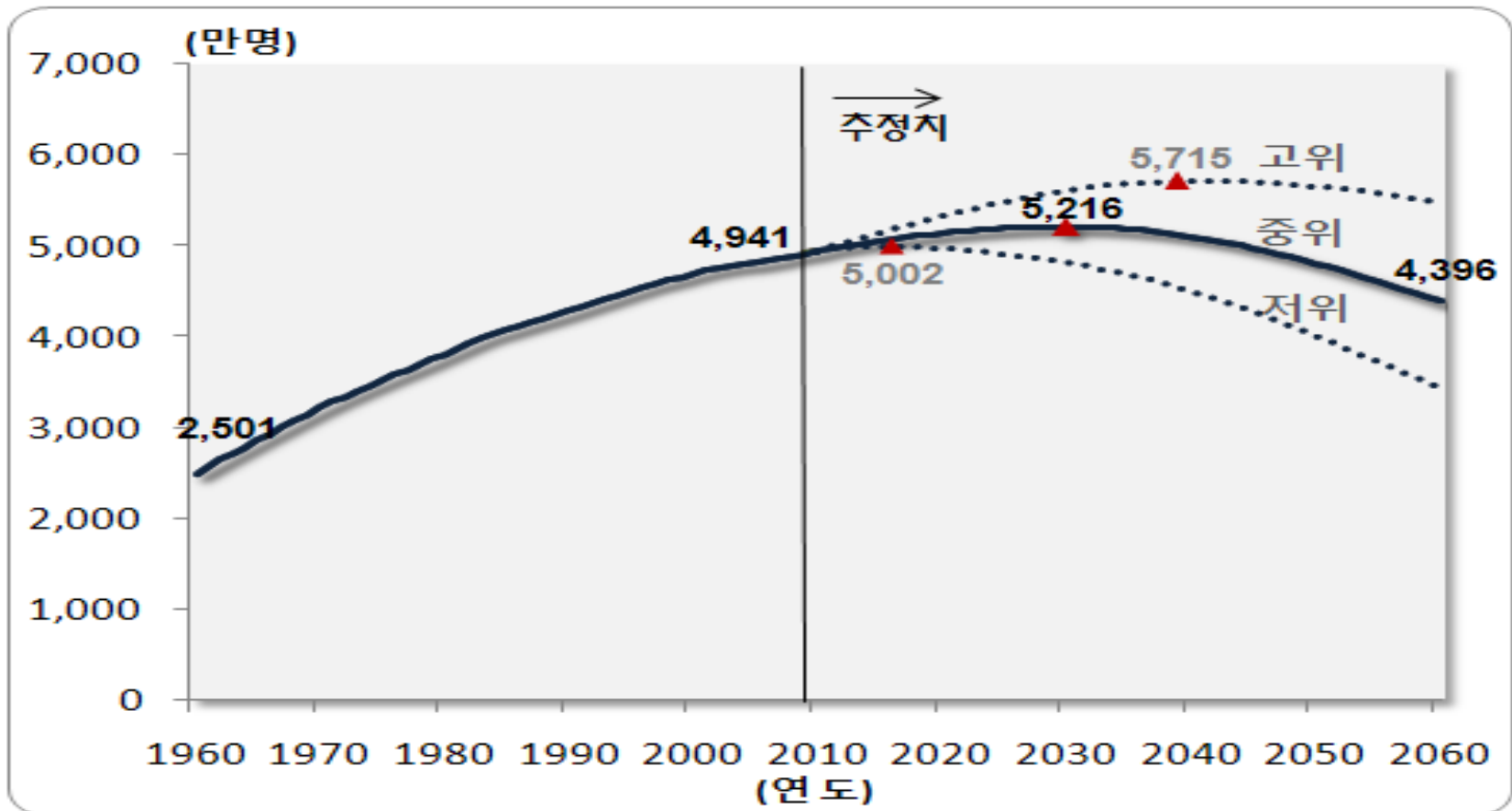
- ◆ 2015년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외국인 포함)는 5,107만명
- ◆ 2010년 4,971만명에 비해 136만명(2.7%) 증가, 연평균 0.5% 증가
- ◆ 인구증가율은 1995년 이후 2%대로 하락



자료: 통계청(2016),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결과

2031년부터 인구 감소

- ◆ 총인구 2030년 5,216만명까지 성장 후 감소, 2060년 4,396만명 수준
- ◆ 인구성장률은 2031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시작, 2060년 -1.0% 수준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0년~2060년, 201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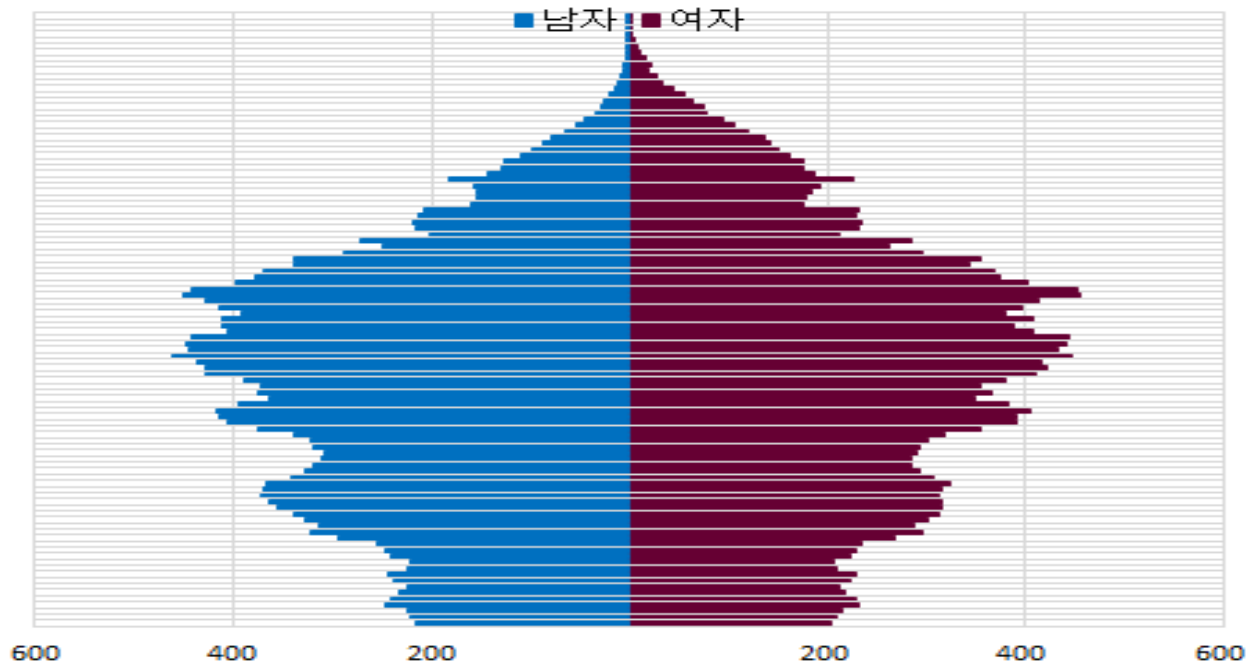
「항아리형」인구피라미드

◆ 연령별 인구구조(내국인)는 40대, 50대 인구가 가장 많으며, 유소년인구가 감소하고 고령인구가 증가(2015년 기준)

- 유소년인구(0-14세)는 13.9%(691만명)로, 2010년 16.2%(788만명)에 비해 2.3%p(97만명) 감소; 1985년 1,209만명에 비해 518만명 감소
-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72.9%(3,623만명)로, 2010년 72.8%(3,551만명)에 비해 0.1%p(72만명) 증가
- 고령인구(65세이상)는 13.2%(657만명)로, 2010년 11.0%(536만명)에 비해 2.2%p(121만명)증가; 1985년 175만명에 비해 482만명 증가
 - 주요국가 고령인구비율(2015) : 일본(26.3%), 이탈리아(22.4%), 독일(21.2%), 프랑스(19.1%), 영국(17.8%), 미국(14.8%)

「항아리형」인구피라미드

<인구 피라미드>



자료: 통계청(2016),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결과

세계에서 유래없이 빠른 고령화

- ◆ 우리나라는 2018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이후 8년 만인 2026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2050년에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 중 고령인구 비중이 제일 높을 것으로 전망
- ◆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를 거쳐 초고령사회로 바뀌는데 주요 선진국의 경우엔 최소한 70~80년 이상이 소요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30년이 채 안 걸릴 것으로 예상

국가	도달연도			증가소요 연수	
	7%(고령화)	14%(고령)	20%(초고령)	7%→14%	14%→20%
일본	1970	1994	2006	24	12
프랑스	1864	1979	2018	115	39
독일	1932	1972	2009	40	37
이탈리아	1927	1988	2006	61	18
미국	1942	2015	2036	73	21
한국	2000	2018	2026	18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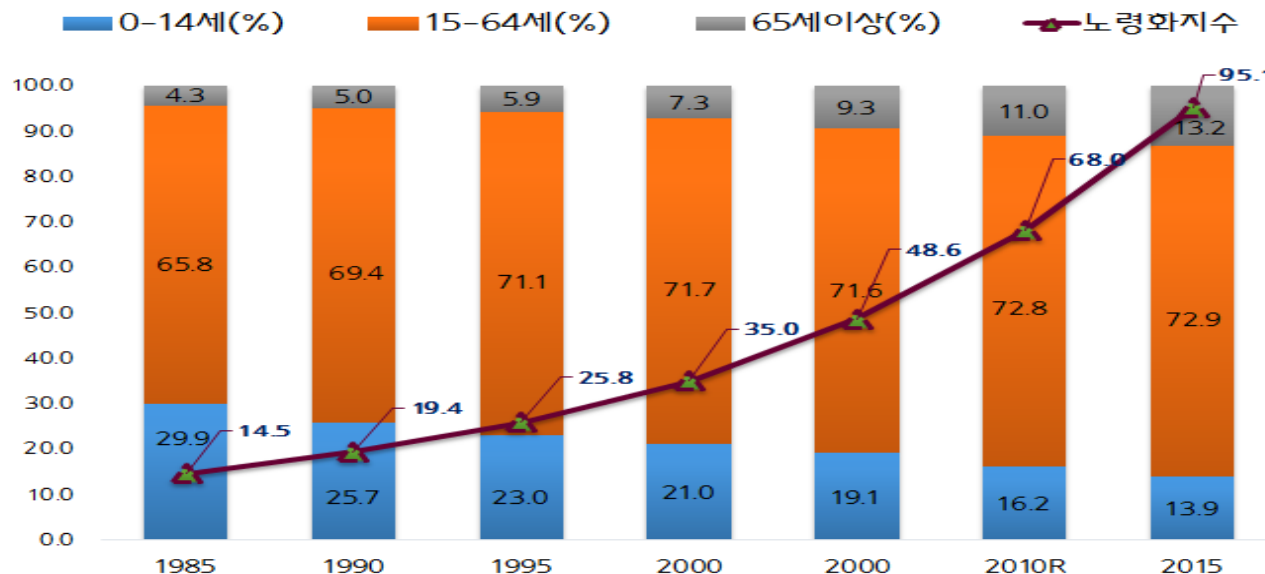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 2006.11

고령자 부양비율도 빠르게 상승

- ◆ 2000년 15.3%에 불과하던 우리나라의 고령자 부양비율은 2050년에는 91.4%를 기록하여 이탈리아, 일본에 이어 세번째로 고령자 부양비율이 높은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

✓ 고령자 부양비율 = (65세 이상 인구수)/(20~64세 인구수)

- ◆ 노령화지수(0-14세인구에 대한 65세이상인구 비율)는 2010년 68.0%에서 2015년 95.1%로 상승: 2020년 125.9, 2050년 429.3으로 상승할 전망



자료: 통계청(2016),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결과

목 차

II. 고령사회와 금융

고령사회에 대한 금융적 접근

- ◆ 고령사회의 금융적 의미: 고용시기 동안 은퇴시기를 대비하고, 은퇴시기 동안 안정적 생활자금 확보 등을 위한 금융적 의사결정이 필요
 - 개인의 소득은 각 연령대별로 다른 반면 소비수준은 평활화(smoothing)가 필요(생애주기가설)
 - 이에 따라 각 개인이 장수리스크(생존리스크, 건강리스크)에 노출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축, 투자 등의 금융적 의사결정이 필요
- ◆ 금융권의 대응: 필요한 금융서비스 특정, 제공방안 및 사회안전망과의 연계방안 도출
 - 고령사회 대비한 금융서비스를 개발하여 효과적으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각종 복지서비스 등 사회안전망과 연계도 강화할 필요

고령사회 대비 금융의 역할

- ◆ **고령사회 대비 금융서비스의 의미:** 재산관리와 더불어 은퇴 이후 필요한 자산을 축적함으로써 은퇴에 대비한 금융수요를 충족하는 것
- ◆ **고령사회 대비 금융시장의 역할:** 고령금융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는 금융인프라의 구축
- ◆ **고령사회 대비 금융정책:** 은퇴자산 축적을 위한 유인을 제공하고, 은퇴자산에 대한 안정적이며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적 여건 마련

고령사회 대비 금융 현황 (1/6)

◆ 개인/가계: 고령화리스크에 대한 노출 증가

- 일반 근로자가 은퇴 이후 기대여명까지 생존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기초적 생활비 및 의료비 등의 소비지출 규모를 충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
 - ✓ 노후 소비지출 대비 연금소득의 부족분은 2013년 현재 60세는 18% 수준이나 40세 32%, 30세 41%에 달하는 상황

<근로자의 노후 개인리스크 추정>

(단위: 만 원)

현재연령 (2013년)	수급개시 (65세)	기대여명 (년)	연금소득	노후생활비	노후의료비	개인리스크 규모	개인리스크 부담률 (%)
30세	2049	26.9	4,522	5,842	1,765	3,085	41%
40세	2039	24.4	3,635	4,347	997	1,709	32%
50세	2029	21.8	3,243	3,234	563	555	15%
60세	2019	19.2	2,222	2,407	318	502	18%

자료: 임형준, 이석호, 저성장과 고령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2013

고령사회 대비 금융 현황 (2/6)

◆ 개인 및 가계는 고령화에 대한 준비가 부족

- 고령화리스크는 증가: 베이비붐 세대나 이후 세대는 대학 진학률이 높은 등의 이유로 은퇴준비 기간이 짧아졌으나 평균수명 연장으로 은퇴분비 부담이 더 커짐.
- 이에 따라 고령화 관련 부담의 상당 부분이 불가피하게 가계자산으로 이전
- 노후생활을 위한 자산, 소득의 부족 및 편중
 - ✓ 가계의 금융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높고,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구성
 - ✓ 우리나라의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합한 실질 소득대체율은 국제적 권고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
 - 우리나라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52.6%로 적정 소득대체율 64.9%에는 12.3%p, 그리고 국제기구(World Bank 등)의 권고 수준인 70~80%와는 최대 27%p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

고령사회 대비 금융 현황 (3/6)

◆ 은행권의 고령금융서비스: 안전자산 관리 위주의 퇴직연금, 개인연금 신탁 위주

- 안전자산 선호를 통한 예금 중심의 금융자산 관리
 - ✓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예금 등 안정적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실증적으로 입증
- 은퇴자금 축적 수단: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한 연금자산 제공
- 종합적인 금융서비스의 부족: 고령자산계층의 유동성 관리 및 자산 관리, 상속 및 증여관련 서비스 제공 등 생애종합자산관리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부족
 - ✓ 부동산 중심의 자산구조 타파 실패, 자영업 대출 위주의 은퇴금융 등 적극적 은퇴금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

고령사회 대비 금융 현황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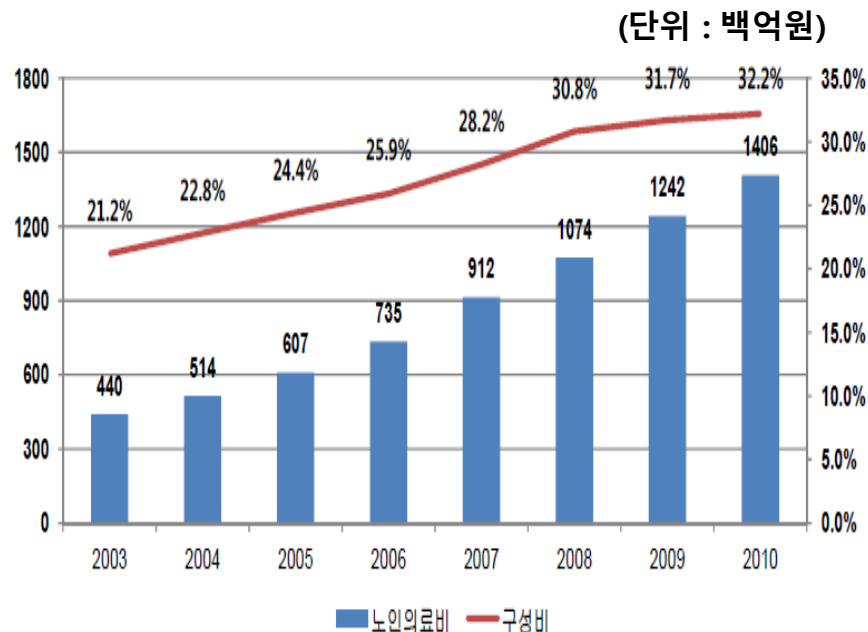
◆ 보험업권: 위험보장과 연계한 연금과 민간 건강보험 및 사망보험에 초점

- 고령자가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가장 어려운 점은 경제적 문제와 건강문제이고,
- 이에 따라 노인 의료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

<고령자가 경험하는 어려움>



<노인의료비의 연도별 증가 추이>



자료: 이석호, 저성장과 고령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2015

고령사회 대비 금융 현황 (5/6)

◆ 금융투자업권: 은퇴관련 신탁, 투자서비스 제공 등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짐.

- 고령화 현상은 장기적, 시장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시장에서 적절한 위험분담이 곤란
- 다만 은퇴 이후의 생활자금 마련, 의료비용 증가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효과적으로 자산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짐.
- 또한 은행예금 이외의 중위험, 중수익 상품에 대한 니즈가 증대

◆ 서민금융: 정책서민금융기관 등에서 은퇴금융서비스 제공은 주택연금 이외에는 미미한 실정

- 고령빈곤층 등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복지 영역과 중첩되는 측면이 존재
- 지역서민금융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서민형 은퇴서비스 확대 등에 대한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음.
- 다만 높은 비중을 보이는 부동산을 유동화해 주기 위해 주택연금 제공

고령사회 대비 금융 현황 (6/6)

◆ 한편 고령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책임 강조에 대한 요구가 증대

- 2012년에 크게 발생하였던 저축은행 후순위채 불완전판매관련 신고민원 중 42.6%가 60세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13년에 문제가 된 동양증권 CP 투자자도 60대 이상이 22.4%(투자금액 기준 30.3%)를 차지하였던 것으로 알려짐.
- 이를 감안하여 2014년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기준의 적합성 원칙에 고령층을 포함한 금융취약계층 보호가 구체적으로 명시됨.
- 또한 금융당국도 소비자 스스로 노후준비 상태를 진단하고 안정된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통합연금포털(<http://100lifeplan.fss.or.kr>)을 개설하여 금융회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우체국 등의 연금을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함.

은퇴금융시장의 특성과 평가 (1/2)

◆ 현재와 미래 간 자원 배분 기능이 미흡

- 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라 변화하는 소득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소비흐름을 담보해 줄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능이 미약
- 또한 자금여유가 있는 사람(주로 은퇴자일 가능성)의 저축을 자금수요가 있는 사람(주로 활발히 생산활동을 하는 젊은이일 가능성)의 소비와 투자로 연결시켜 주는 세대간 자본 이동 수단의 제공도 미흡

◆ 주택연금 중심의 주택 유동화에 초점

- 2007년 주택연금이 도입된 이래 2016년 5월말 기준 29,463 가구가 이용
- 이는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자가주택보유 60세 이상 고령가구의 약 1% 수준에 불과
- 다만 2016년 '내집연금 3종 세트'의 도입과 적극적 홍보로 증가속도가 빨라지고 있음.

은퇴금융시장의 특성과 평가 (2/2)

◆ 국민연금 등 공적 보장 기능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낮은 소득대체율로 실질적 보장이 곤란

-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국민연금(1층), 안정적 삶을 보장하는 퇴직연금(2층), 여유 있는 삶을 보장하는 개인연금(3층)으로 구성
-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합한 실질 소득대체율은 국제적 권고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

◆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포용 확대 요구에 대한 대응도 불충분

-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 특히 현재의 주거비용, 교육비, 생활비 등에 대한 부담 및 세제혜택 유인 부족 등으로 노후생활자금에 대한 준비가 미흡
- 또한 저소득층의 경우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 기능을 통해 보완하고 있으나 은퇴비용 대비 비흡한 상황

목 차

III. 고령사회 대비 금융인프라 구축방안

고령사회 대비 금융인프라 구축에 대한 기본방향

◆ 현재와 미래 간 자원 배분을 관장하는 금융의 기본 역할을 수행

- 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자원배분 및 세대간 자원배분 등을 원활히 수행할 필요
 - ✓ 노동기간과 은퇴기간이 모두 늘어나면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은퇴 설계 및 준비를 위한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필요
 - ✓ 현재 공존하는 세대간 자본 이동(투자, 증여)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 세대간 자본 이동(상속)에 관한 서비스 제공 필요

◆ 은퇴에 대비한 금융역량 제고를 위한 국가적 플랜이 강화될 필요

- 고령사회에 대한 금융청사진 제시: 금융청사진을 통해 은퇴소득을 높이기 위한 은퇴금융이 체계적, 장기적, 지속적, 종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인프라의 외연 확대
- 은퇴금융 인프라는 은퇴자뿐만 아니라 청장년층에 대해서도 확대될 필요
-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의 연계성이 높아질 필요
- 은퇴금융에 대한 소비자 보호 강화 필요
- 은퇴자산의 효과적 축적을 위한 정책 강화: 고령화로 인한 저성장, 저금리 기조에서 장기수익률 제고 필요

고령사회 대비 금융인프라 구축: 세부과제 (1/4)

◆ 종합은퇴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리 및 정보 체계 구축

- 은퇴자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체계 구축
- 예를 들면, 국민연금에 의해 통합된 정보를 민간 금융회사의 은퇴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개인연금상품 다양화

- 연금의료비 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에 의료비 보장 기능을 추가
- Catch-up Policy: 노후준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베이비 부머를 위해 짧은 기간 내 노후 준비가 가능하도록 일시적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 조치
- Substandard Annuity(영국):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연금액이 조정
- Reister Pension(독일): 저임금자 등이 개인연금에 가입할 경우 매년 국가에서 일정금액을 보조해주는 독일의 국가지원 연금제도
- 민간 주택연금 활성화: 현재 보조금에 의해 활성화 되고 있는 공적 주택연금이 중장기적으로 조정되면 주택연금시장이 활성화될 여지

고령사회 대비 금융인프라 구축: 세부과제 (2/4)

◆ 신탁서비스를 활용한 은퇴설계 서비스의 활성화

- 은퇴 이후, 간병 또는 치료 등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은퇴자산의 관리 부실 문제를 신탁서비스를 통해 해소
- 일본의 사례: 영미식 생전신탁,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등을 통해 종합적인 은퇴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산상속서비스, 세무상담서비스, 간병 관리 등의 부가서비스도 제공

◆ 자본시장을 활용한 장기형 투자상품, 장수리스크 헤지 수단의 개발 확대

- 장수리스크 헤지 수단의 제공: 연금지급기관의 장수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생존율(사망률) 지수를 설정하여 사전 약정 기준과 사후 실현치의 차이에 따라 원리금을 변동하여 지급하는 장수채권 등의 개발, 활용 확대
- 투자기간에 따른 세제상 유인을 차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장기상품을 확대
- 연금자산가치의 변동성 축소하기 위해 퇴직연금, ISA 등에 편입할 수 있는 적격투자 상품제도를 도입하여 안정형 투자를 확대

고령사회 대비 금융인프라 구축: 세부과제 (3/4)

◆ 경제의 장기수익률 제고를 위해 자본시장을 활용한 신성장동력 창출

- 클라우드펀딩, 벤처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담당할 산업/기업의 발굴 및 육성하고,
- 사회간접자본, 신재생에너지 등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한 대체투자처를 적극적으로 발굴

◆ 은퇴 이후 소득흐름을 안정화하기 위해 연금수급방식을 다양화

- 정액방식의 수급에 비해 최저수급 방식, 재투자 방식 등을 통해 은퇴자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가는 것도 필요

◆ 은퇴자산의 효과적인 축적체계 구축

- 주택금융의 긍정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금융자산을 중심으로 은퇴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함.
- 저금리, 저성장 하에서는 국내자산과 해외자산에 대한 차별적 접근을 지양하고, 적극적으로 해외 투자기회를 발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상품화

고령사회 대비 금융인프라 구축: 세부과제 (4/4)

◆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

- 금융교육, 캠페인 등을 통해 노후 준비의 중요성, 연금소득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
- 노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에 대해 (은퇴)금융서비스 제공 시 금융회사로 하여금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요구
- 또한 분쟁 발생 시 은퇴자의 은퇴자산에 대한 보호 등을 위한 법률적 체계를 개선해 나갈 필요

◆ 거시적 관점에서 금융안정 필요

- 공적 연금이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배구조, 운용체계 등에 대한 장기적, 지속적 관심이 필요
- 국민연금의 은퇴금융시장의 참여 확대: 주택연금시장, 장기MBS시장 등
- 금융포용 확대: 서민 등 취약계층 대상 신탁 및 연금 서비스 모델을 적극적 개발

고맙습니다!